



## 공무원 · 직장인 2015년 연금 일원화 법률(안) 4월 제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일본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각각의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 법(안)을 확정하여 2012년 4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.

- 동 법률(안)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부터 통합하고, 후생연금보다 낮은 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 9월부터 후생연금과 동일한 18.3%(노사 절반부담)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사실상 공제연금이 폐지되는 것임.

■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의 후생연금(소득비례 공적연금), 공무원의 공제연금으로 이뤄짐.

- 이 중 공무원 공제연금과 회사원 후생연금은 똑같이 소득비례로 연금을 납부하는데 보험요율이나 연금지급액에서 공제연금의 조건이 훨씬 좋아 특혜 논란이 그치지 않았음.
- 현재 후생연금의 보험요율은 소득의 16.412%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,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공제연금의 보험요율은 15.862%임(과거 2%p → 현재 0.55%p 차이).
- 또한, 공무원은 직역가산급부라는 명목으로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이 비슷한 일반 회사원보다 연금을 2만 엔 정도 더 받아왔음.

■ 한편,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통합 법률(안)은 2007년 자민당 정권이 국회에 제출했던 법(안)과 거의 같은 내용임.

- 공무원 특혜를 없애라는 여론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자민당 정권은 두 연금의 통합 법률(안)을 제출하였으나,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며 동 법(안)을 폐기시킨바 있음.
- 피고용자 연금 일원화는 노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이지만, 직역가산급부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 일정이 연기될 예정임.

(요미우리신문, 시사통신, 니혼게이자이신문 3/15 등 종합)